

## 요약문

우리나라는 2008년 녹색성장을 화두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국가역량을 모으고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신국가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해서 기후변화는 근본문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국가 패러다임 논의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내용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은 지구평균의 2배(지난 100년간 1.5도 증가)에 이르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해수면 상승 폭이 지구평균의 3배(지난 40년간 22cm)에 달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 문제인 동시에 지역적인 전 방위 문제로서 공동의 대응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은 IPCC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일관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선진국들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립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간의 기후변화 대응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위주의 정책 아이টে을 도출하여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지식경제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외국 우수사례 분석과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대응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독일, 영국 등 국외 사례조사와 국내 중앙부처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자체간 협력 사례 분석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아래 나열된 것과 같이 A. 파트너쉽 분야(5), B. 에너지 자원 분야(9), C. R&D 및 기술표준 분야(3), D. 기타(정보통신, 기금 등) 분야(3) 등 4개 분야 22개의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 A-1. 지경부와 지자체간 자발적 협약체계 구축
- A-2. 지역 에너지·온실가스 종합 지원센터 운영
- A-3. Green Home 정보센터
- A-4. 지자체의 에너지-탄소 등급 사업
- A-5. 재생에너지 기술 도우미 파견 사업

- B-1. 목표전력(에너지)량 지원제도
- B-2. 저탄소 배출구역 설정사업
- B-3. 태양에너지 마일리지 제도
- B-4. 지자체 에너지 조세환급 제도
- B-5. 지능형 조명 시스템 설치 사업
- B-6. 지역별 태양열 난방공급 비율 의무화 제도
- B-7. Biomass 회수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사업
- B-8. 신재생에너지 활용 특구 지정 사업
- B-9. 재생에너지 증서 발급 사업

- C-1. 지역특색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R&D 공동 추진
- C-2. 기후변화 대응 R&D 성과 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
- C-3.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

- D-1. 에너지 기금 조성 사업
- D-2. 기후변화 대응 교육프로그램 확대
- D-3. 기후변화 대비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 D-4.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신산업 발굴 및 육성지원
- D-5. CO<sub>2</sub> 저감 전국 캠페인 투어 사업

제안된 협력방안은 지식경제부에서 단독 시행가능하거나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 위주로 제안되었으며,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및 제한요인에 대해 제시하였다. 각 사업별 구체적 실현방안은 차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22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은 정치적, 행정적,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법적 실현가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법적실현가능성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20여개 이상의 법률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치적-행정적-기술적 실현가능성은 AHP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AHP방법을 위해 전문가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법에 의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제시된 협력방안 대부분이 법적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치적-행정적-기술적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B-9(재생에너지 증서 발급 사업), D-5(CO<sub>2</sub> 저감 전국 캠페인 투어 사업), A-2(지역 에너지·온실가스 종합 지원센터 운영)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A-2, D-5, C-3(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 등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정책대안의 시행효과는 경제적 효과는 B-5(지능형 조명 시스템 설치 사업)와 D-4(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신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회적 효과는 C-3, 환경적 효과는 B-2(저탄소 배출구역 설정 사업), 외교적 효과는 D-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D-5, A-2 협력방안이 실현가능성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시행 효과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구체적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응도 필요하나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IPCC를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 주체는 행정력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며 인간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단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 주체로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과제의 결과로 제시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행동 주체인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행동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정부주도하의 전략은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간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제시와 제시된 정책대안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해야할 협력방안에 대해 제시했으나, 본 연구는 다수의 정책대안 도출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로서 연구결과 제시된 협력방안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서 사전 철저한 정책분석이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